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내년 정부 예산 400조7천억 원, 복지예산은 130조 원

01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 복지 예산 130조 원이 포함된 400.7조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
 - 전체 예산은 올해 추경 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천억 원) 대비 1.4% 늘어난 수치이며, 복지 예산(보건·복지·노동 분야)은 전년 대비 6.6조 원, 5.3% 증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예산	257.1	284.5	292.8	309	325.4	341.9	355.8	375.4	386.4	400.7
복지분야	61.7	67.8	73.9	78.9	84.8	88.7	97.2	115.7	123.4	130.0

*단위 : 조 원

- 예산편성안의 핵심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 일자리 예산은 17.5조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청년일자리 확대 및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20→30만원) 등
 - 저출산 극복 지원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 →2세 이하로 상향

구 분	'16	'17안	증가율	비 고
기초생활보장	101,311	103,434	2.1	· 생계급여(32,728→36,191)
취약계층 지원	24,989	25,403	1.7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4,370→4,551)
공적연금	427,062	453,998	6.3	· 국민연금급여지급(185,488→199,043)
보육가족여성	57,654	58,520	1.5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8,168→8,607)
노인청소년	94,210	97,327	3.3	· 기초연금지급(78,692→80,961)
노동	172,950	188,353	8.9	· 구직급여(51,228→56,613)
보훈	48,181	49,811	3.4	· 보상금(25,130→26,047)
주택	194,381	211,800	9.0	· 행복주택(13,211→25,070)
사회복지일반	7,917	8,280	4.6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833→902)
보건	105,339	103,080	-2.1	· 건강보험가입자지원(70,974→68,764)
합 계	1,233,995	1,300,006	5.3	5.3% 증가

*단위 : 억 원

-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소극적인 예산안이라고 지적
 -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 8.5%에도 미치지 못하며,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의 증가분이 2조6000억 원을 차지해 자연증가분에 기댄 예산만으로는 저출산, 양극화,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는 2017년 예산을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에 맞춰 편성하고 민선 6기 특화사업에 대한 예산 집중으로 인해 복지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
- 지방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복지 재정 전략이 필요

2. 경기도민 소득, 월 338만원, 시군 간 314만원의 격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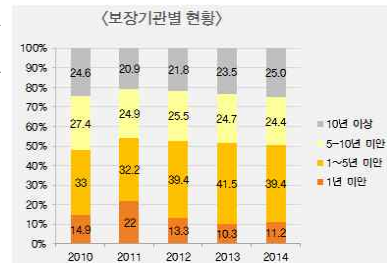
01 주요 내용

- 경기복지재단(2016)의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민의 경상소득은 월 338만원이며 가구형태별, 시군별 소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가구형태별로 보면, 아동가구가 424만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이 포함된 가구 224만원,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210만원, 저소득 가구 100만원 등으로 최고와 최저간 324만원의 차이 발생
 - 시군별로 보면, 연천군이 약 180으로 가장 적고, 과천시가 494만원으로 가장 많아 314만원의 차이가 남
 -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간 10분위수 배율은 0.333으로 2014년 0.302(빈곤통계연보)에 비해 더 높아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기간 : 3. 15. ~ 6. 30.
• 조사대상 : 19세 이상 경기도민 총 30,918명(18,573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7,803명(25.2%), 장애인 2,695명(8.7%), 저소득층 2,978명(9.6%)
• 조사내용 : 가구 일반사항(가구형태, 근로형태, 소득, 지출), 주거, 일자리, 돌봄서비스, 건강, 여가 인프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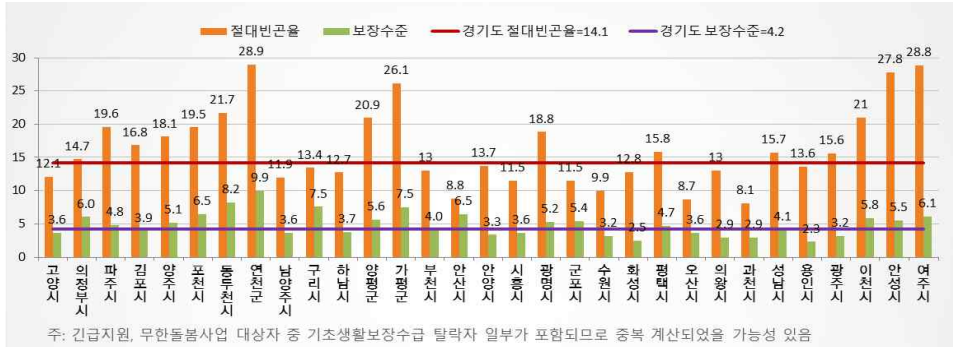
-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가구나 장애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월세공과금 연체, 끼니거름, 의료서비스 이용 못함 등)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각각 30.2%와 18.8%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6.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 중 1.0%만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이며 나머지 5.3%는 사각지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2.7%이고, 신청이유는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 (76.4%)하기 위해서이나 생계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92.1%가 '부족하다' 고 응답
 -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부터 감소하다가 2015년에는 맞춤형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2014년 대비 큰 폭(38.7%)으로 증가
 -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비율은 2011년 이후 증가 추세로 만성적인 빈곤문제에 놓여 있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 경기도민의 빈곤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절대빈곤율은 14.1%, 상대빈곤율은 18.1%*이며, 가구형태별, 시군별 차이가 발생
 - 가구형태별 빈곤율은 아동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각각 5.3%와 5.7%이며, 노인가구는 31.0%와 39.3%, 장애인가구는 38.8%와 48.0%, 1인 가구는 33.3%와 49.5%로 나타남
 - 시군별로 보면,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연천군(28.9%, 37.6%)이 가장 높고 과천시(8.1%, 10.9%)가 가장 낮음

*절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비중이고,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비중임

-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기초생활보장(3.3%), 긴급복지지원(0.7%), 무한돌봄사업(0.23%)의 수혜비율은 4.23%에 불과하여 절대빈곤에 처한 경기도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
 - 보장수준과 절대빈곤간 격차는 여주시가 22.7%포인트로 가장 크지만, 배율은 용인시가 5.9배로 크고, 격차와 배율 모두 높은 지역은 안성시(22.3%포인트, 약 5.1배)



- 정부차원의 소득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89.9%는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72.3%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
 - 62.4%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을 노후생활대책으로 하고 있어 주택가격 등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노후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
 - 베이비부머(1955~63)의 90.9%가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동두천(76.8%)이나 구리시(77.8%), 하남시(79.5%)는 준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함
-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는 각각 206만원과 278만원이며, 시군별로 최소생활비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125만원)이고, 적정생활비가 가장 많은 곳은 과천시(352만원)
 - 안산시(273만원)는 최소생활비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가평군(180만원)은 적정생활비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나 시군간, 시군내 차이 존재
- 전체 가구 중 14.6%는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며, 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 비중은 69.8%이나 저소득가구는 94.9%로 소득 대부분을 지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움
 - 시군별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출 비중은 가평군(88.2%)이 제일 낮는데, 전반적으로 군지역, 농촌지역의 생활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용인시의 저소득층 생활비 지출 비중이 9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수원시(97.6%)임. 양주시의 경우 농촌형 지역임에도 생활비 지출비중이 97.2%로 세 번째로 높음

02 경기도 시사점

-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가구가 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31개 시군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이들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원 연계 활동을 지속 추진
- 10년 이상의 만성적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법사업 등 다양한 탈빈곤 정책을 추진
 - 9월 1일 출범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업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발하여 취업할 때까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무한서비스" 를 실시
-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소득과 빈곤실태를 가구형태별로, 시군별로 분석한 거의 최초의 자료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함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시군별 빈곤율 분석... 연천 최고, 과천 최저

올해 경기복지재단이 실시한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31개 시군별 소득빈곤 실태와 현행 소득보전제도 수급 현황을 분석

- 경기도민 소득실태 분석결과 빈곤율은 18.1%로 나타났으며, 시군별로는 과천의 빈곤가구 비율이 10.9%로 가장 낮고 연천이 37.6%로 가장 높음
 - 시군별로 연천·안성·여주·가평·이천·포천 등 농촌형 지역의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도시형 지역에서는 성남·광명의 빈곤율이 높음
 -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각 49.5%와 48.0%로 가장 높아, 대상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한 것으로 분석*

*시흥의 경우 도내 유일하게 노인가구 빈곤율이 가장 높음

<표 1> 시군별 빈곤율 및 소득보전제도 수급율

지역	상대빈곤율*				1인가구	수급가구 비율		
	전체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기초보장	긴급복지	무한돌봄
과천	10.9	5.8	24.7	49.3	53.1	2.43	0.38	0.08
안산	11.8	3.4	32.3	47.3	39.5	4.50	1.49	0.48
오산	12.1	2.9	38.3	52.9	32.0	2.63	0.76	0.21
시흥	13.6	4.0	44.7	40.4	40.1	3.03	0.41	0.13
수원	13.6	4.7	33.2	53.8	38.2	2.59	0.45	0.14
남양주	14.4	7.8	30.8	31.5	36.3	3.04	0.50	0.11
군포	14.5	5.6	35.7	55.9	43.0	3.41	1.77	0.19
하남	15.7	3.2	35.0	39.8	62.1	2.89	0.56	0.27
고양	16.1	5.6	33.6	48.3	54.5	3.03	0.40	0.18
구리	16.1	4.0	35.0	45.9	41.4	4.46	2.72	0.38
화성	16.3	2.9	39.9	45.3	50.8	1.93	0.42	0.11
의왕	16.4	3.5	39.6	42.1	46.2	2.28	0.40	0.21
부천	16.7	8.0	39.9	61.0	44.8	3.43	0.37	0.25
용인	16.7	2.9	37.0	36.9	47.6	1.29	0.49	0.49
안양	17.9	6.3	41.2	43.2	53.0	2.84	0.29	0.19
경기	18.1	5.7	39.3	48.0	49.5	3.28	0.68	0.23
의정부	18.2	6.0	34.0	46.1	50.5	5.06	0.70	0.25
평택	18.6	5.2	36.9	47.1	54.8	3.57	0.90	0.19
광주	18.6	3.8	38.2	48.0	58.9	2.46	0.55	0.15
성남	19.5	7.9	45.2	61.9	60.1	3.50	0.47	0.10
김포	21.4	7.6	41.4	43.3	47.2	3.04	0.75	0.11
양주	21.6	6.8	44.7	48.4	58.8	4.36	0.55	0.22
광명	23.3	6.6	45.4	51.3	61.4	3.41	1.34	0.48
동두천	25.9	13.9	47.8	47.4	55.2	7.09	0.75	0.35
양평	26.5	14.0	36.4	43.4	68.1	4.61	0.81	0.15
파주	27.2	10.5	46.6	37.7	46.9	4.03	0.66	0.11
포천	30.4	14.4	46.5	51.5	68.0	5.48	0.60	0.39
이천	30.5	13.1	46.9	50.0	54.7	3.39	2.02	0.42
가평	34.7	14.2	48.9	52.4	53.8	5.87	1.34	0.29
여주	35.1	10.0	53.5	59.5	71.0	5.22	0.53	0.31
안성	35.2	8.6	51.7	50.1	62.2	4.77	0.34	0.37
연천	37.6	18.9	44.8	57.5	64.0	7.68	1.55	0.67

(단위 %)

- 빈곤율 및 수급현황을 통해 소득보장 수준을 비교해보면 안산·군포·구리·의정부의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주·용인·안성·의왕·안양·김포·파주는 낮은 편임
 - 안산의 경우 빈곤율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편이나 수급비율은 6.46%인 반면, 용인의 경우 빈곤율은 열다섯 번째이나 수급비율이 2.27%에 그치는 등 시군별 보장수준 차이 존재

2. 주요행사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제17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및 제27회 전국사회복지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9. 7.(수) 14: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참석 : 보건복지부장관·국회의원 및 사회복지 관련자 등 1,000명

03 FACT CHECK

계층 간 상향이동, 여전히 유효한가?

-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자녀 세대에도 계층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
 - 이는 통계청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없고, 나아가 자신의 자녀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현실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 자녀의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48%를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 2015년의 평균값은 32%로, 자녀 세대의 계층상승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은 3명 중 1명 뿐
- 한국사회가 이제는 귀속지위가 성취지위보다 우세한 '단한사회'로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중첩된 '다중 격차' 사회라는 현실비판도 제기**
- 소득, 자산, 소비 그리고 교육과 주거에서의 불평등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매듭 없는 완전한 사슬 구조를 형성
 - 가정의 소득과 자산 → 사교육 → 대학진학 → 노동시장 → 소득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어느 하나에서 이탈되면 좀처럼 다시 끼어들기 어려운 배제적 성격을 보임
- 아직까지 대학 진학이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나,
 - 대학 진학 후에도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한 생계형 근로 학생은 자기계발을 투자가 적어 대기업 취업 및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
- '수저론'으로까지 불리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노동, 사회보장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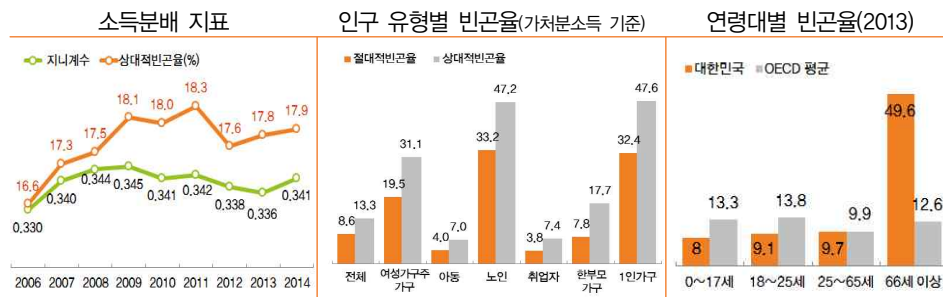
*이왕원·김문조 (2016). 한국인의 상향이동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전병유·신진옥 (2016).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 페이퍼로드

***한국고용정보원(2016).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차이.

04 통계로 보는 복지

빈곤과 소득 양극화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6(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빈곤통계연보(중), OECD 홈페이지(우)

- 2014년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7.9%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14년 0.341로 2006년 0.330에 비해 악화
- 인구 유형별 빈곤율에서는 1인가구(47.6%), 노인(47.2%), 여성가구주 가구(31.1%) 순인 것으로 나타나,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아동부터 청·장년층까지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의 네 배에 이르고 있음

* 단위 : %